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한 새로운 청렴문화의 시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순서



1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2 청탁금지법 제정의의

3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 부정청탁의 금지
- ◆ 금품등 수수 금지
- ◆ 위반행위 신고 · 처리
- ◆ 신고자 보호 · 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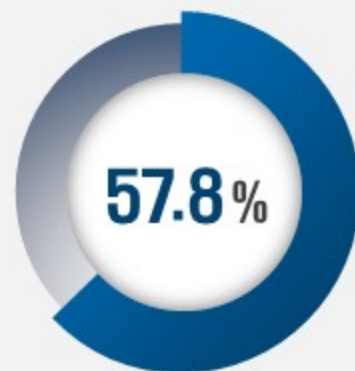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1 2

●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매우 낮은 수준

15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일반국민의 부패인식 수준
“공직사회는 부패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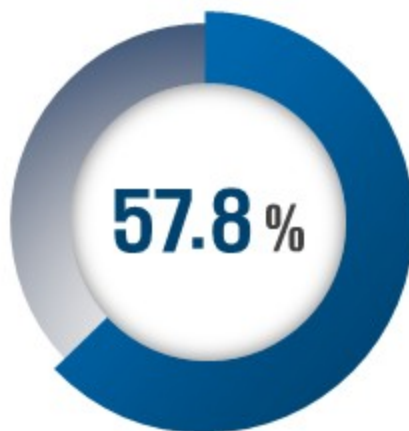


공직사회에 대한 부패인식 수준

일반국민의 부패인식 수준
“공직사회는 부패하다”



공무원의 부패인식 수준
“공직사회는 부패하다”



’ 15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인식의 차이’
54%p



’ 15년 권익위 부패인식도 조사

일반국민과 공직자의 인식의 차이가 시사하는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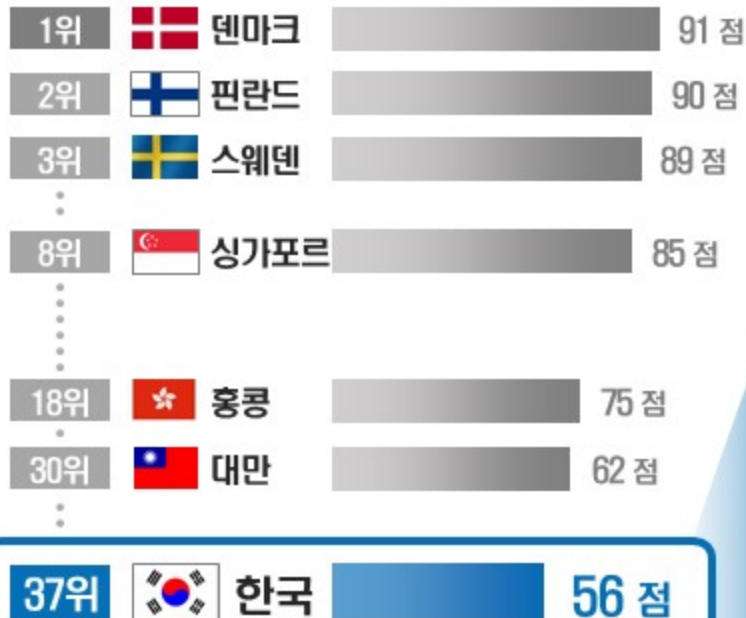
- ▶ 국민들이 기대하는 공직사회의 청렴 수준이 공직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수준임을 의미
- ▶ 국민들의 시각에서 ‘부패’를 공직자들은 관행으로 여겨 문제의식을 갖지 못함

청탁금지법 제정배경 1 2

답보상태인 한국의 청렴수준 향상

2015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

※ 출처: 국제 투명성 기구(ITU' 16.1월)



한국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 국가경쟁력에 비해 공공부문의 청렴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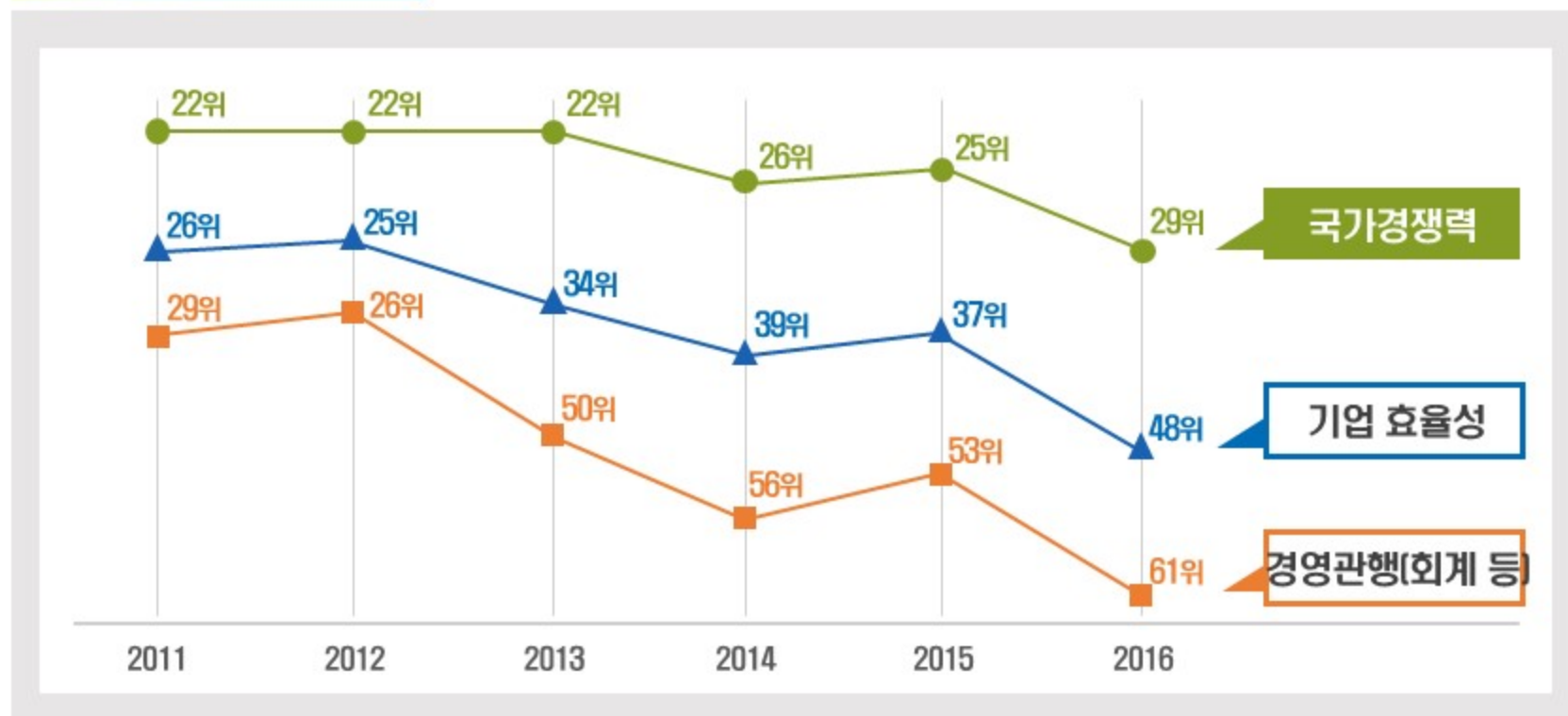
2015 국가 경쟁력 지수 순위 ※ 출처: 세계경제포럼(WEF, 15.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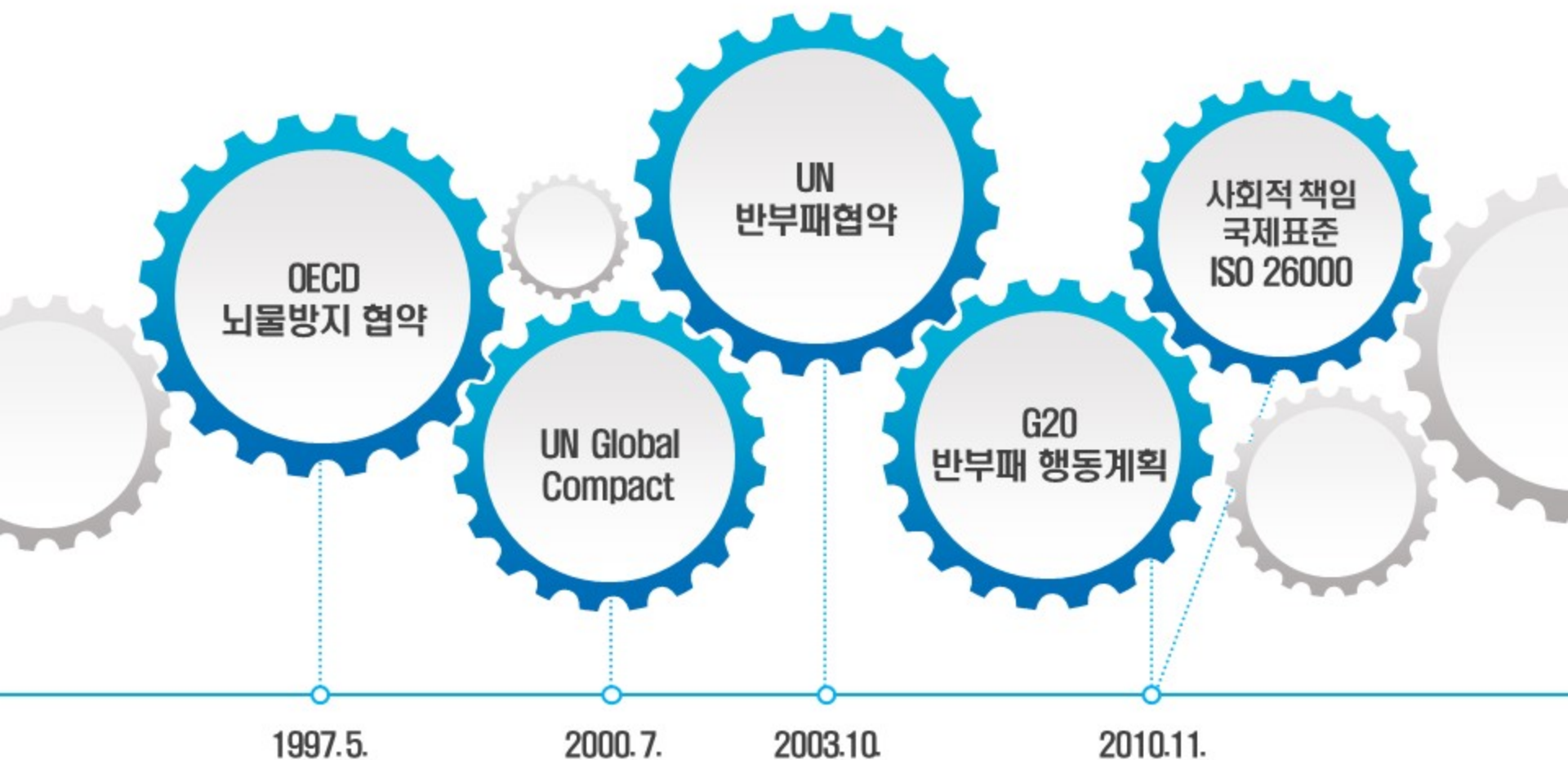
한국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

● 민간부문도 청렴수준이 상대적으로 취약

2016 국가 경쟁력 평가 순위 ※ 출처: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 '16.5월)



국제사회의 반부패 흐름



청탁금지법 제정의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 신뢰 확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로 인한 청탁이
부정부패의 시작

거액의 금품등을 수수 하더라도
대가성 등이 없다는 이유로
처벌 받지 않아 국민 불신 증가

부정청탁 행위 금지를 통해
부정부패로 이어지는
연결고리 차단

직무관련성·대가성 등이 없어도
제재 가능토록 하여
국민 신뢰 회복



선익의 공직자등의 보호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제공 받을 경우
직무수행의 공정성 저해

공직자등의 배우자를 통한
간접적·우회적인 금품등 제공으로
선익의 공직자등 피해

신고 등 절차 준수시
사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으로부터
선량한 공직자등을 보호하여
공정한 직무수행 담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 인지시
신고·반환하면 면책되도록 하여
선익의 공직자등 보호



법률 적용대상

적용 대상기관



- ✓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 ✓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적용 대상자



- ✓ [공직자등]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
- ✓ 공직자등의 배우자
- ✓ 공무수행사인
 - ※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자
-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자

부정청탁의 금지

●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부정청탁의 금지 금지행위

- 부정청탁에 대한 명확한 판단기준 제시를 위해 부정청탁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
→ 법에 열거된 14가지 대상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행위

1 인가·허가등 직무 처리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3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법령 위반 + 지위·권한 남용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 투자 등에 개입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개입	13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금지행위 자세히 보기

1. 인가·허가 등 직무처리
인가·허가·면허·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들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4.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 주관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에 개입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포상·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6.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 누설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7. 특정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에 개입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 등의 배정·지원·투자 등에 개입
보조금·장려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금지행위 자세히 보기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학교 입학·성적 등 업무 처리·조작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등 병역 관련 업무 처리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 개입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행정지도·단속 등 대상 선정·배제, 위법사항 묵인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 등 업무 처리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5. 지위·권한 남용
위 1호부터 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부정청탁의 금지 예외사유

●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를 7가지로 규정

1	2	3	7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4	5	6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직무·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 신청·요구	질의·상담을 통한 법령·제도 등 설명·해석 요구	

예외사유 자세히 보기

1. 법령 · 기준에서 정한 절차 · 방법에 따른 특정 행위 요구
 법령 · 기준에서 정하는 절차 · 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 · 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 · 기준의 제정 · 개정 · 폐지를 제안 · 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 요구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3.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고충민원 전달 등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 · 기준의 제정 · 개정 · 폐지 또는 정책 · 사업 · 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 · 건의하는 행위
4. 법정기한 내 업무 처리 요구 등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 · 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 · 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 · 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 증명 등 신청 · 요구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 증명 등을 신청 · 요구하는 행위
6. 질의 · 상담을 통한 법령 · 제도 등 설명 · 해석 요구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 · 제도 · 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부정청탁의 금지

부정청탁에 대한 대응조치

공직자등



최초 부정청탁 받을 경우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



동일한 부정청탁
다시 받을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 신고는 감독기관 · 감사원 ·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소속기관장



수사 필요성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관할법원에 위반사실 통보



부정청탁 관련
주요내용 기록 · 관리



필요 시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조치사항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

직무 참여
일시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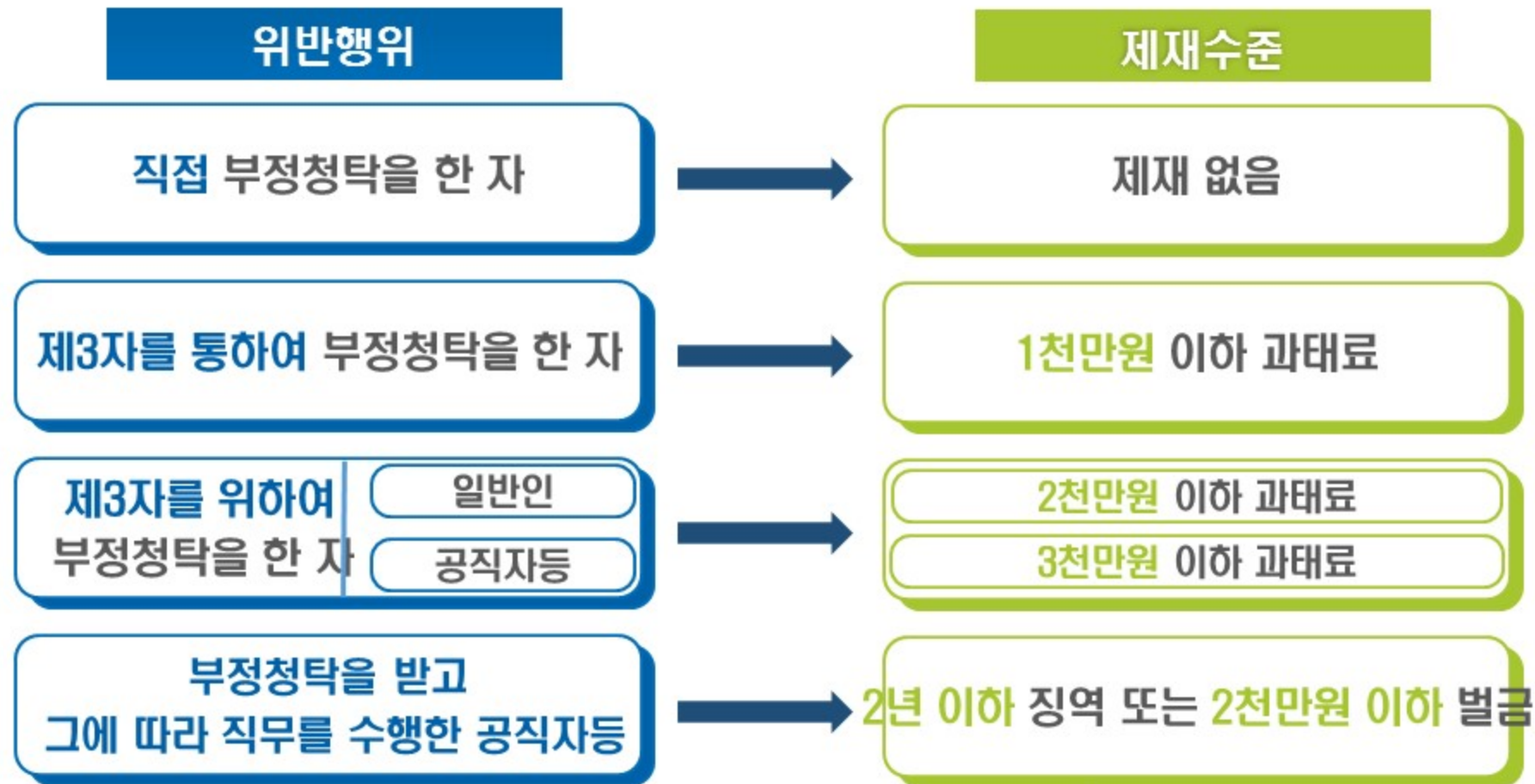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전보

부정청탁의 금지 위반시 제재

● 부정청탁에 따른 제재 수준 (※ 위반행위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징계를 의무화하여 벌칙과 징계 병과)



부정청탁의 금지 사례 1

이해당사자가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C를 직접 찾아가 허가를 내 줄 것을 부탁한 경우

● 토지소유자 A

형질변경허가신청
잘 좀 처리해 주세요!



토지소유자 A

제재대상에서 제외되는
직접 청탁

■ 군청 담당공무원 C

요건이 미비한데,
어떻게 해야 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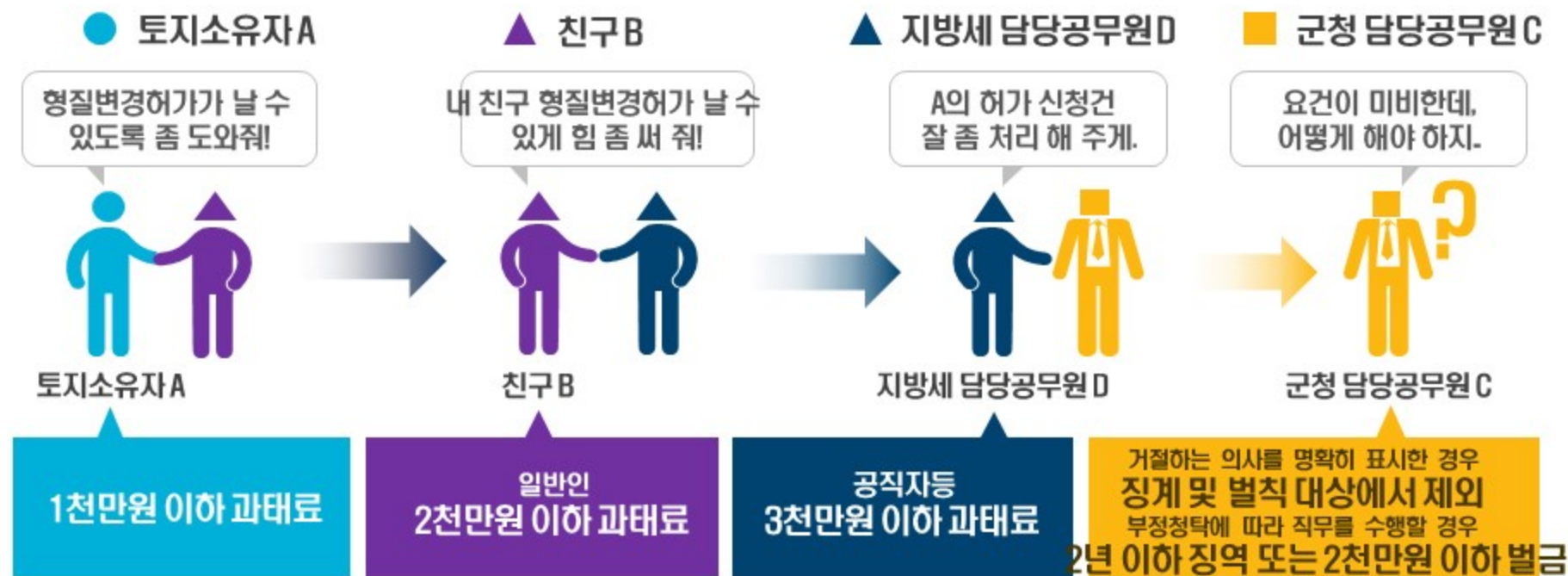
군청 담당 공무원 C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부정청탁의 금지 사례 2

복수의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군청 담당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자신의 친구 B에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부탁하였음. 이에 토지소유자 A의 친구 B는 다시 자신의 친구인 ○○군청 지방세 담당공무원 D를 통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청탁한 경우



부정청탁의 금지 사례 3

법인 소속 직원이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 건설회사(주) 소속 직원 A가 건축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내줄 것을 △△구청 건축허가 담당공무원 C에게 청탁한 경우

● 건설회사(법인)

▲ 건설회사 직원 A

■ 건축허가 담당공무원 C



OO 건설회사

건축허가를 못 받으면
회사 손해가 막심하니
건축허가 좀 내주세요.



건설회사 직원 A



건축허가 담당공무원 C

요건이 미비한데,
어떻게 해야 하지.

청탁금지법 제24조(양벌규정)에 따라
2천만원 이하 과태료
(다만, 상당한 주의·감독시 면책)

제3자(법인)를 위하여 부정청탁을 한 일반인
2천만원 이하 과태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징계 및 벌칙 대상에서 제외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양벌규정

- 종업원 등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 또는 과태료 부과
-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 면책

기업의 자율적인 반부패·청렴노력이 형벌의 양형이나 과태료 가액 산정 시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민간부문의 청렴성 확보장치로 기능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법인·단체 또는 개인

금품등 수수 금지

● 청탁금지법의 핵심내용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금품등 수수 금지 적용기준

공직자등과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기준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도 공직자등과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

금품등 수수 금지

수수 금지 금품등

‘금품등’ 의 정의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 · 주류 · 골프 등의 접대 · 향응 또는 교통 · 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 · 무형의 경제적 이익



금품등 수수 금지

예외사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등

<p>1</p> <p>공공기관이 소속·파견 공직자등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p>	<p>2</p> <p>원활한 직무수행, 사고·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p>	<p>3</p> <p>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p>	<p>4</p> <p>공직자등의 친족(민법 제777조)이 제공하는 금품등 ※ 친족의 범위: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p>
<p>5</p> <p>공직자등과 관련된 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p>	<p>6</p> <p>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p>	<p>7</p> <p>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p>	<p>8</p> <p>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p>

금품등 수수 금지

수수 금지 금품등 제공에 대한 대응조치

공직자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제공의 약속·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안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 혹은 **거부 의사 표시**



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인도**

※ 신고·인도는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가능

소속기관장



수수 금지 금품등에 대해
반환·인도 또는
거부 의사 표시 요구



수사 필요성 있을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과태료 부과대상인 경우
관할법원에 **위반사실 통보**

조치사항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

직무 참여
일시정지

직무
대리자의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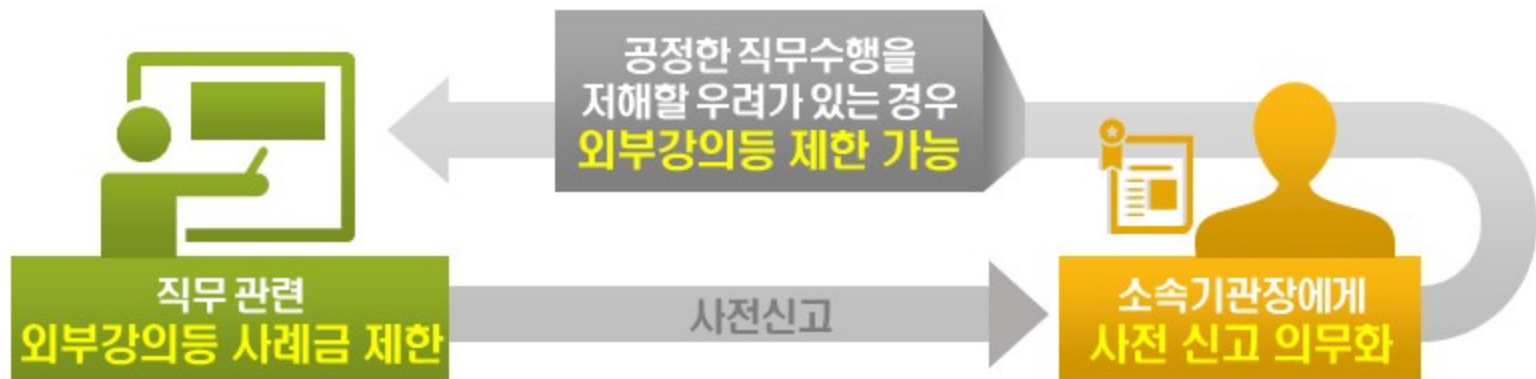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

전보

공직자등이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인도**한 경우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금품등 수수 금지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 직무 관련 외부강의등을 할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사전 신고 의무화
→ 사전 신고 의무 불이행 시 징계처분 대상
-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 기준 금액 초과 사례금 수수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 지체 없이 반환
→ 신고 및 반환 조치 미 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금품등 수수 금지 사례 1

회계연도 관련 사례

○○시청 지방세 담당 공무원 A가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B로부터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합계 350만원 상당의 금품등을 받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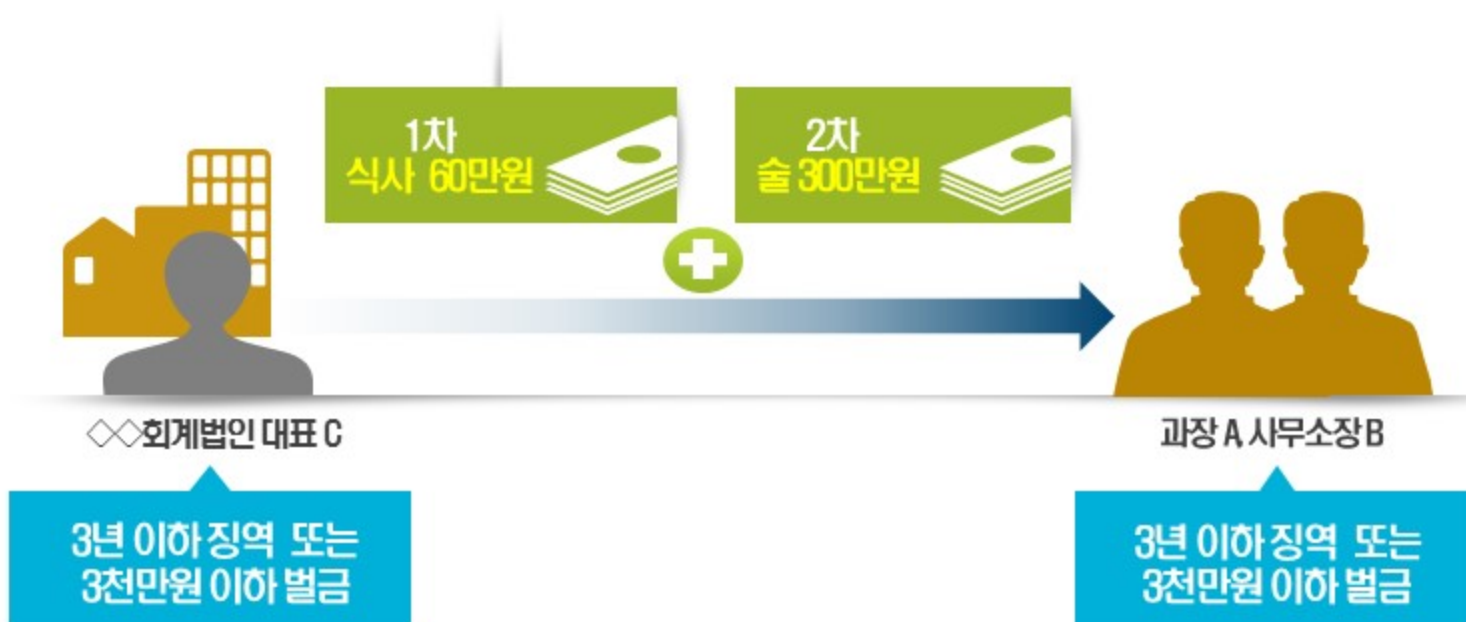
[※ 세무사 B는 공무원 A가 근무하는 ○○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러한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음]



금품등 수수 금지 사례 2

1회 관련 사례

○○공공기관 과장A와 해당 공공기관 서울 소재 사무소장B는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회계법인의 대표C와 함께 식사를 한 후 대표 C가 식사비용 60만원을 계산하였고, 같은 날 A·B는 대표 C와 함께 술을 마시고 대표 C가 술값으로 300만원을 계산하였음



금품등 수수 금지 사례 3

동일인 관련 사례

○○도 건축위원회에 ◇◇건설회사(주)가 건축하고자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이 심의대상으로 상정되었음. 이에 ◇◇건설회사(주) 소속 임원 B는 70만원 상당의 양주를, 소속 직원 C는 3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소속 직원 D는 30만원 상당의 식사를 심의위원으로 참여하는 국립대학교 교수 A에게 각각 제공 또는 접대를 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24조양벌규정에 따라
140만원 ~ 350만원 과태료
+ 60만원 ~ 150만원 과태료
+ 60만원 ~ 150만원 과태료

B: 140만원 ~ 350만원 과태료
C: 60만원 ~ 150만원 과태료
D: 60만원 ~ 150만원 과태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금품등 수수 금지 사례 4

배우자 금품등 수수 사례

○○시 문화정책과장 A의 배우자 C가 남편의 고교 동창이며 ○○시에서 문화창작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오페라 감독 B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오페라 초대권 2장을 받은 경우

문화창작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는 상태



오페라 감독 B

120만원 ~ 300만원
과태료

오페라 초대권 2장
합계 60만원



1. 모른 경우
2. 알고 신고한 경우
3. 알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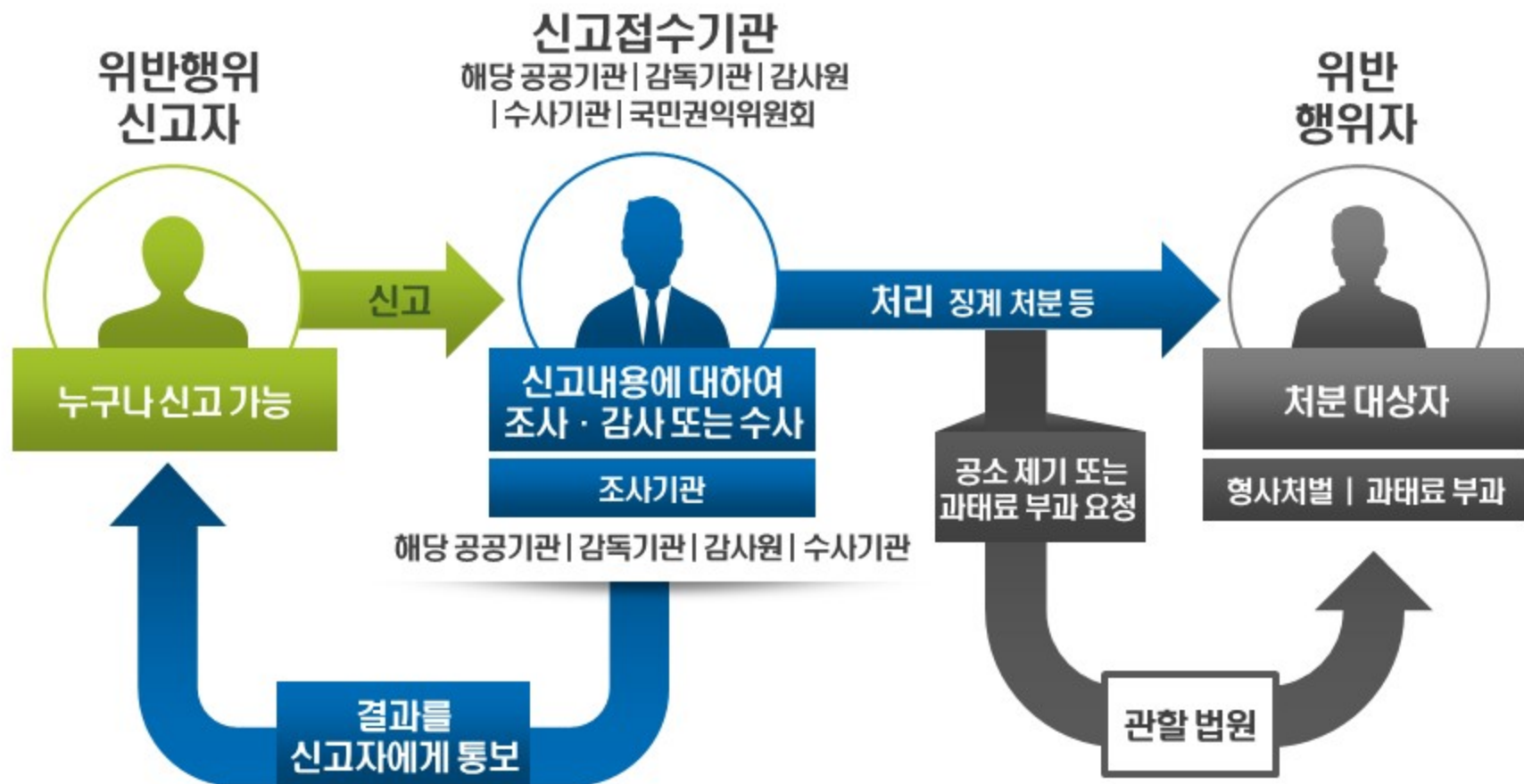


문화정책과장 A 배우자 C

1. 제재대상 아님
2. 제재대상 아님
3. 120만원 ~ 300만원 과태료

위반행위 신고 · 처리

청탁금지법 위반사례 발견시 신고 · 처리 과정



신고자 보호 · 보상

신고자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및 금전적 보상

신고자 보호

신고자
비밀 보장

불이익조치
금지

신고자
신변보호

신고자
책임감면

공익신고자 보호법 준용



신고자 보상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 · 손실 방지,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 가능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 · 증대,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의
신청

보상금
지급

부패방지권익위법 준용



누구도
부정청탁 · 금품수수의 유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주기전 **30초**,
받기전 **30초**.

30초의 생각이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국민권익위원회

Anti-Corruption &
Civil Rights Commission